

#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1조 등 총 12조 핵심 재정사업 추진

기재부,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5년간의 12대 핵심 재정사업 선정  
고착화된 연 100조 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 수준으로 줄이기로

정부가 올해 반도체 경쟁력 확보 1조 원 등 총 12조원 가량의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재정건전성 관리에 들어가고, 연간 100조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58조 원 수준으로 절감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재정비전 2050' 계획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5년간의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4대 재정정책방향으로 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전재정기조 착근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으로 정했다.

이어 12대 핵심 사업으로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과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

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 전략 기술 집중투자,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존 실현, 국격·외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만 0~1세 아이 양육 가정에 월 35만~7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사업, 병장 봉급 130만원 인상 등 민생 안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1000억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에 대비,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 등 총 340조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건전재정기조 아래 연간 100조여원으로 고착화됐던 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원, 절반 가량 줄여나갈 계획이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재정비전 2050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됐다. 현재 5년 단위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기에 한

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립된 범정부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정부는 이달 내 재정사업 성과관리팀을 구성한다.

팀은 기재부와 소관부처, 핵심 재정사업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향후 재정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해 성과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성과관리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 성과 정보는 열린 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소형 SUV '인기'... 車 업계, 출시경쟁 치열

현대차 코나 플채인지 모델 출시  
쉐보레 상반기 신형 CUV 예정  
기아 셀토스·니로로 시장공략  
르노 XM3하이브리드 생산량 확보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 위축이 예상되면서 비교적 가격 부담은 적지만 다양한 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갖춘 차량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출시하는 소형 SUV 모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 말형인 현대차가 2017년 출시한 코나의 플채인지 모델을 출시한다.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코나는 전면에 수평형 램프 적용과 함께 전장, 축간거리가 늘어나면서 넉넉한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코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등 다양한 파워트레

인의 모델을 갖췄다. 1세대 코나가 2017년 출시 당시 국내 사전계약 5000대를 기록하며 초기 흥행돌풍을 일으킨 만큼 2세대 모델이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올 상반기 소형 차종인 신형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차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차종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단종했던 소형 SUV 쉐보레 트랙스의 완전변경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UV의 공간성을 확보하면서 1.2L가솔린 터보를 탑재해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형 트랙스는 차체를 키웠지만 가격은 낮춰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지난해 출시한 신형 셀토스와 니로로 소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선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소형 SUV 모델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말에 출시한 XM3 하이브리드의 생산량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XM3 하이브리드는 가장 전기

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차로 유럽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내 출시 전 5000여대의 사전계약을 기록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신차 출시에 나서면서 소형 SUV 경쟁은 어느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인 기아 셀토스(4만2983대)가 여전히 견재하고, 현대차는 18일 2세대 코나를 선보일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의 XM3(1만9561대), 쌍용차 티볼리(1만1343대)도 지난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여기에 한국지엠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1만4458대) 역시 출시 3년이 지났지만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내 공간 효율성 등을 앞세워 준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공간 효율성이 뛰어난 대형 SUV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고급리 등의 영향으로 소형 SUV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올해는 국내는 물론 수입차 업체들도 소형 SUV 출시를 예고해 어느때보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정부, 기업 실질적 성과 위해 촘촘히 지원"

>> 1면 '尹, 세일즈외교 결실'서 계속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13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이외에도 11건의 MOU가 체결되면서 총 48건의 MOU가 윤 대통령의 2박 3일 국빈 방문 중에 이뤄졌다.

이 수석은 "이런 MOU는 양국의 경제협력력을 한 차레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부는 48건의 MOU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촘촘히 지원하고, 수출전략회의에서도 논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즈니스포럼과 병행해 개최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양국의 100여개 기업들이 참여해 257건의 1대 1 상담을 진행했고, 1100만불(약 136억원)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윈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관리·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 수출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우리의 중동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UAE와의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양 정상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행동으로 뒷받침한 데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문에서 50건의 가까운 약정·계약이 체결돼 양국 간 미래 협력의 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300억불의 UAE 대(對)한국 투자 결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파트너로서 한국 역량에 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보여준다"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UAE 확고한 신뢰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이러한 가시적 성과 외에 양 정상 간 유대를 굳건히 한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중국의 한국 국민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비자 신청을 문의하러 온 시민들이 안내받고 있다. /뉴스1

## "中 방역완화, 현지 韓기업 영향 제한적"

산업부,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조업·물류 일시적 차질 있을수도"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 등 보복성 조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에서 열린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전망이 나왔다. 회의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책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물류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충실 연후로 인해 적어도 1월 중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적지

에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회복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드코로나 전환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자,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당 국가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이후 한중관계 파장 등을 고려해 공무 비자와 시급한 일부 비즈니스 목적 비자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치 않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상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회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공급망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들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진출기업들의 조업·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